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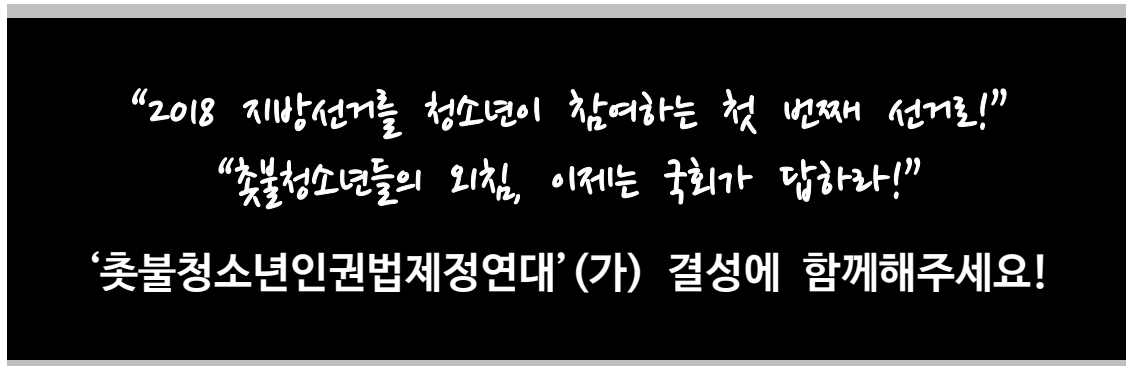


인권친화적 학교+너머 운동본부

서울 마포구 창전동 6-264 / hrs3388@gmail.com / 02)365-5412

강원교육연대/ 건강세상네트워크/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/ 경북교육연대/ 공익인권법재단 공감/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/ 광주교사실천연대 '활'/ 광주노동자교육센터/ 광주비정규직센터/ 광주여성노동자회/ 광주인권 운동센터/ 광주인권회의/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/ 광주YMCA/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/ 교육공동체 나다/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/ 군인권센터/ 노동자연대/ 녹색당/ 대안교육연대/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/ 문화연대/ 민주노동총서올본부/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/ 민주주의법학연구회/ 불교인권위원회/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/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/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/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/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/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/ 어린이책시민연대/ 원불교인권위원회/ 인권교육센터 들/ 인권교육 온다/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/ 인권배움터 봄+1/ 인권운동사랑방/ 전국교직원노동조합/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/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/ 전북평화와인권연대/ 종교자유정책연구원/ 진보교육연구소/ 참교육을위한전국 학부모회/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/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/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/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/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/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/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'친구사이'/ 한국성폭력상담소/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/ 흥사단교육운동본부/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

- 날 짜 : 2017년 8월 24일(목)
- 수 신: 교육·인권·평화·청소년 및 제 사회단체·동아리·학생회 등
- 제 목: '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'(가) 참여 제안서
- 문 의 : 배경내() 주리()



1. 인권과 평화, 교육개혁을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와 활동가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.
2. '인권친화적학교+너머운동본부'(아래 너머본부)는 '폭력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, 인권의 학교를 넘어 인권 친화적 사회로'를 기치로 전국의 학생인권운동 단체들을 그려모아 2012년 결성된 연대체입니다. 너머본부는 창립 이래 △지역별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지원 △교육감후보와의 인권정책 협약식 개최 △전국 학생인권·생활 실태조사 △학생인권법 제정/학교폭력법 개정안/학교밖청소년지원법안 개정활동 등 입법활동 △불량학칙 공모전과 학생인권 상담 지원 △청소년참정권 확보 간담회 △대선후보의 청소년인권 의식에 대한 공개 질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.
3. 지난 겨울, 광장에 쏟아져나와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. 바

7.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귀 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랍니다. 기타 궁금한 내용이나 제안하고픈 내용이 있으면,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고맙습니다.

[첨부자료] 촛불인권법제정연대 목표와 주요 계획안

[별첨 1] 8/19 '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위한 전국간담회' 자료집

[별첨 2] 8/19 '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위한 전국간담회' 속기록 요약본

[별첨 3] 8/19 '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위한 간담회' 속기록

[첨부자료]

“2018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!”
“촛불청소년들의 외침,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!”

‘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’ (가) 목표와 계획안

■ 제안 취지

○ 청소년을 시민으로!

: 촛불의 힘으로 바뀐 새로운 정부 하에서도 청소년은 투표는 물론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조차 할 수 없는 현실. 청소년인권의 암울한 현실은 청소년의 참정권 없음과 결정적으로 연결.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, 촛불 청소년들의 외침에 이제는 사회와 국회가 ‘청소년 시민권’ 보장으로 답해야 함.

: 촛불정국을 지나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져 있는 상태.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위가 꾸려지고 관련 법률의 제·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, 정치개혁의 핵심에 청소년 참정권이 있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.

: 문재인 정부는 18세 선거권 보장을 약속한 정부이기도 하나, 청소년 참정권은 18세 선거권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음. 청소년 선거권·피선거권 연령의 하향,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참정권 보장이 필요.

○ ‘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’ 민주주의와 인권 확보

: 최근 현장실습생의 자살, 여주+부안+부산 등 여고 성폭력 사건, 김포외고의 아동학대 폭행 사건, 우신고 폭력 사건, 창원 여고에서의 몰카 사건 등 학생인권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. 이와 같은 사건들이 개별

적 사건이 아니라 학생·청소년의 삶이 놓은 사회구조의 문제이고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 형성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.

: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, 학생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른 지역별 격차가 상당.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 차원의 안전망 확보가 시급.

: 9년간의 이병박근혜 정권 아래 학생인권운동의 흐름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학생들의 학교를 바꾸기 위한 힘겹고 외로운 싸움이 온오프라인에서 지속. 학생들과 연대하는 교사들도 힘겨운 상황에 놓여있음.

○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에 숨통을!

: 학생인권조례뿐 아니라 청소년노동인권조례조차 공격받고 무산되고 있음. 반동성애세력의 조직적 반대운동으로 교육청과 의회를 움직이기 쉽지 않음.

: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위상이 취약하여 조례 제정 지역에서도 난관에 부딪히고 있어 입법을 통한 해결이 절실. 지금은 미래의 운동을 내다보며 한 단계 질적 도약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기.

○ 학교 밖 공간에도 인권의 숨결을!

: 기존 청소년 관련 법률은 보호·통제 중심이며, 어린이·청소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인권 보장 법안이 전무한 상태.

: 현장실습, 청소년노동, 학원 폭력, 시설 내 인권침해, 탈가정청소년의 삶의 위기 등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필요. 지역별 청소년인권 관련 조례 제정운동이 가로막힌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본법으로서 아동·청소년인권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함.

: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아동·청소년인권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음. 교육·인권·청소년 운동의 요구사항이 포함됨

■ 활동 목표

○ 2018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선거로!

: 청소년 선거권,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 관련법 개정
예) 공직선거법, 교육자치법, 정당법 등

○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학생인권법 제정

: 학칙을 통한 인권침해와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

: 초·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의 내용과 권리보호체계 구축

○ 올바른 ‘아동청소년인권법’ 제정을 위한 활동

: 18세 이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목록 구체화, 인권정책과 인권보호체계의 유기적 통합성 확보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

■ 주요 활동

- 법률안 마련과 입법 제안 운동 전개
- 지역별 대시민 캠페인과 서명운동 전개
- 전국적 차원의 청소년 당사자 참여 활동 조직
- 대국회, 대정부, 교육청 압박 활동
- 전국 순회 간담회, 토론회 등 개최
- 교육감 선거 대응

■ 주요 시기별 활동 (현재~2018년 6월 지방선거)

※ ‘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’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움직이는 한시적인 연대체로 일단 출발.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

※ 구체적 활동내용과 시기는 9/10 2차 간담회에서 확정

○ 1단계 (현재~ 올해 말)

- :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(가) 결성 및 제안 법안 내용·요구안 확정
- : 참정권 연령 하향 및 폐지를 위한 국회 정개특위 대응
- : 교육감 선거 후보 공약사항에 학생인권 내용이 들어가도록 대응
- : 지역별 공론화를 위한 간담회, 토론회 개최 및 청소년단위 조직
- : 범시민사회운동 내부의 공론화 계기 마련 및 협력 조직

○ 2단계(2018년 초~3월)

- : 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청소년/시민 직접행동 진행
- : 지역별 공론화 계기 마련 및 대대적인 캠페인 진행
- : 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국회 대응

○ 3단계(2018년 3월~ 6월 지방선거)

- : 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청소년/시민 직접행동 진행
- : 헌법 개정 논의에 발맞춰 인권친화적 교육의 필요성, 청소년 참정권 등 주장
- : 교육감 후보의 학생인권(법) 지지 선언 조직 및 선거 대응

■ 향후 주요 일정

-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출범을 위한 2차 간담회
 - 9월 10일 오후 12시/ 전교조 대전지부 강당
 - 참석이 어려운 참여단위는 메일 등을 통해 서면으로 의견 제출
-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출범
 - 9월 중·하순

- 권역별 간담회 또는 토론회 개최
 - 10월부터 11월 3일 학생의 날까지 지역별 공론화와 청소년 당사자 활동 강화를 위한 활동 전개

- 촛불 1주년 맞이 직접행동
 - 10월 28일 촛불1주년 맞이, 대대적 캠페인 전개

■ 참여단체의 주요 역할

- 권역별 간담회 또는 토론회 개최
 - 지역 상황에 맞는 캠페인/서명운동/입법 제안활동 전개
 - 분담금 납부: 추후 안내 (청소년단위는 면제 가능)
-